"광주교육청 예산 선심용 아니냐"

진선기 시의원 지적

사립유치원 지원 200만원→19억원으로 껑충

교육환경개선비도 학교 배정없이 35억 편성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폭 편성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편성한 학부모 정책 예산도 급증해 자칫 이 사업이 선거용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진선기 의원(민주·북구1)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고작 200만원을 지원했던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이 19억여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예산은 올해 예산에 없던 사립유치원 원감 교직수당과 교사 담임수당 비용이다.

시교육청은 원감 600명에게 월 15만원씩 연 10억800만원의 교직수당을, 교사 632명에게는 월 11만원씩 연 8억3천여만원을 담임 수당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근거로 타 지자체의 수당 지급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년 6월2일 직접 선거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원칙 없는 예산 편성으로 '자의적 지원'이 가능토록 편성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없이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개선에 7개학교에 1천만원씩 모두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7개 학교가 명시되지 않아 교육청이 '자의적 판단'으로 7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산이 무려 3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학부모 정책 사업비도 급증했다. 학부모 독서회 등 지원 2억4천여만원, 학부모 교육 강화 1억2천여만원 등 총 5억1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학부모 정책 예산으로 1억8천만원 이상 확보하라'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학부모 정책 예산이 증가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진 훈련상황입니다" 2일 필리핀 마닐라 파라나크 국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비 훈련중 책으로 머리를 가린 채 엎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개발계획 탄력

道, 법정자본금 900억 완납

내일 기업도시위 상정키로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지구 중 하나인 구성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오는 4일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이하 기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구성지구 개발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출자사들이 법정자본금 900억 원을 전액 납입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오는 4일 기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도위 심의는 정부승인과정의 마지막 절차다.

구성지구 개발계획안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출자사 변동으로 법정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기도위 상정이 지연돼왔으나 최근 보성건설·한양·남해종합건설·광주은행·전남개발공사·전남도 등으로 출자사가 확정, 자본금이 모두 납입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송영종 전남도 투자정책국장은 "구성지구 개발계획안이 오는 4일 기도위에 상정되면 이달 말까지 개발계획이 지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도위를 통과하면 SPC와 함께 즉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구성지구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1.8km에 도시조성비 8천953억 원과 관광레저시설비 4조 원이 투입돼 1만8천여명이 거주하는 녹색생태 관광도시로 건설된다.

종합스포츠센터와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테마파크, 스파랜드, 바이오산업 및 에너지 단지,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연간 400만 명이 방문해 12만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1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U대회 지원법' 회기내 처리 불투명

국회 본회의 파행…예산안 상정 법정시한 넘겨

여야 합의 없을 땐 연말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이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 유탄을 맞으면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2015 광주 U대회 지원법은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연말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일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 중이던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을 국회 사무처가 강제 퇴거시킨 것과 관련,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안은 일주일 후인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된다는 점에서 광주 U대회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안이 처리되고 이날 오후나 다음날 오전 특위를 열어 광주 U대회 지원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 U대회 지원법은 정기국회 폐회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과 광주 U대회 지원법 통과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적극 나선다면 극적으로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광주 U대회 지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이 민주당 지도부와 한나라당 측을 적극 설득, 정기국회 폐회 이전 국제경기지원특위를 가동시켜 광주U대회 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U대회 지원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말 임시국회 처리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광주U대회 지원법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프간 증파 놓고 '미국은 분열중'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미군을 증파하고 19개월 내에 철군을 개시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프간 전략에 대해 미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증파 결정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철군 시간표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작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었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의로 철군 시작 시점을 정한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철군 시점은 동맹국은 물론 적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철군 시간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출구전략이 아니라 성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아프간 내 군대 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지 사령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의 (아프간) 임무가 무한정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기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전 접근법을 이전 (부시) 행정부의 접근법과 구별 지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국제공공디자인 '생활환경' 최우수상

광주시가 올해 도입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 2009'(International Public Design Award 2009) 생활환경시설물 분야에서 최우수상으로 받았다.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 2009'는 민간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이 주최하고, 2009국제공공디자인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광주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은 시가 올 1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함께 개발한 버스승강장, 가로등, 볼라드, 펜스,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시설안내 표지, 벤치 등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8종이다.

한편 시상식은 2010년 1월 중순 국회에서 열리고 PDA(Public Design Award) 인증마크가 수여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는 여객 중심, 무안은 화물·군사공항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委, 국토부에 건의문

광주 지역 관광·숙박업계 인사들이 참여한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2일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유치위는 건의문에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살리는 방법은 광주공항의 경우 호남권의 여객중심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고 무안공항은 화물공항이나 군사공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며 "국제공항으로 인정받지 못한 무안공항 대신 광주공항 국제선을 재취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또 "광주공항 국제선이 무안공항으로 옮긴 후 결국 국제선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다"며 "광주 공항이 존재하는 한 호남권의 국제선은 옛날처럼 광주공항에 재취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